

2025. 12. 02.[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29
차도순 국장 010-6436-1726 / 이철호 보좌관(김남근의원실) 010-8268-2752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대책 촉구 기자회견

2025년 12월 2일 (화) 09: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의 3천3백7십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소비자피해 발생
-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과 실질적인 배상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쿠팡과 정부에 명확한 배상 요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월 2일 화요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대책 촉구 기자회견에는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남근·박주민·안도걸·염태영·정진욱·이강일·김승원·권향엽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함께 참여했다.

국내 최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에서 3,370만 명이라는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의 명확한 원인과 경위 그리고 유출 범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피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등 필수적인 정보가 아직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소비자는 여전히 불안과 피해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다.

특히 쿠팡은 회원 탈퇴 과정을 어렵게 만든 비정상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도 소비자가 스스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소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국내 최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에서 3천3백7십만 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유출 사고의 원인과 실질적인 배상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가 빚어낸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쿠팡은 여전히 정확한 유출 경위, 침해 범위, 재발방지 대책, 피해배상 방안 등 어느 것 하나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회원탈퇴조차 모바일에서는 거의 할 수도 없고, PC버전에서도 6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쿠팡과 정부에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한 강력한 요구사항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요구사항 >

■ 쿠팡에 요구한다.

- ① 쿠팡 본사의 김범석 의장은 즉각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발표하라.
- ②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③ 쿠팡은 회원탈퇴를 원하는 소비자가 모바일, PC 등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탈퇴가 가능하도록 즉시 개선하라.
- ④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소비자 보호 및 배상 계획을 수립하라.
- ⑤ 쿠팡은 대폭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소비자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

■ 정부에 요구한다.

- ①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라.
- ②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수조사하라.
- ③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촉구한다.
- ④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 ⑤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

우리 소비자단체는 이번 쿠팡 사태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 접수를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이상한 문자, 메일, 전화 등에 대해 링크를 누르거나 응답하지 마시고, 소비자단체(국번없이 137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는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이며 소비자의 기본권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대책위원회